



보건복지동향

2005. 6. 18 ~ 2005. 7.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확정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 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2조 9,331억원 규모의 5개년계획으로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2개분야 40개 과제).
-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
-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

새로운 조직공학기술을 이용한 뼈의 개발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의 골수에서 뽑아낸 성체줄기세포를 생체 내에서 분화시켜 뼈를 만드는 연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부의 조인호/김형범박사 연구팀은 “텍사메타손과 비타민 C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를 이용한 골수줄기세포로부터의 뼈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케미컬 바이오피지컬 리서치 커뮤니케이션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에 그 결과를 게재하였으며 7월 15일 출판예정임.
- 기존의 조직공학연구에서 뼈를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진 골형성성장인자 등과는 달리 텍사메타손과 비타민 C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생산되는 인공뼈는 가격 면에서 매우 저렴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향후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예상되는 빈번한 뼈의 손상(사고나 질병에 의한)에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생활에 기여할 것임.

인터넷을 통해 실종아동 접수·검색 가능

실종아동 신고부터 실종아동등록 및 검색, 실종아동 발생예방교육 등 실종아동관련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www.missingchild.or.kr)에서는 전국에서 발견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 2천여 개의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병원등에서는 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신고할 수 있음.
- 입력한 아동카드는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과 일반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건강검진 비정상판정자 입원진료비 정상인보다 70% 더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 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비정상판정자는 향후 의료비가 70%까지 급증하고 혈

압, 총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심장병,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92~'99년 건강검진대상자 2,319,464명 (남자 1,649,421명, 여자 670,04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 동일인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검사항목의 변화를 추적조사 분석한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검진결과 비정상 판정자의 입원급여비용 약 70%까지 더 많이 지출.
- 연령 증가할수록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비만도 수준 급격히 증가.
- 건강검진 주요검사항목의 질환발생과의 관련성: 콜레스테롤치는 낮을수록(180미만)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좋고, 가장 적정 혈압 수준은 수축기 120미만, 이완기 80미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 시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항목 중 52개 항목에 대하여 1차로 의견수렴(5.30~6.10) 과정을 거쳐 고시개정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총 85개 항목 중 1개 항목은 재검토 중).

※ 약제기준 32개 항목은 5월7일까지 18개 항목, 6월20일 14개 항목 별도 고시개정 완료(7월 1일부터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 수탁과 차등수가 등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

올 9월부터 암, 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부담 대폭 감소

올 9월부터는 암 환자와 큰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

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
- 이번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07년에 가서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 이와 더불어 '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기준병실)로 되어 있어,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할 것이라 밝힘.

보건복지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 -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 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이·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
- 기타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가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개됨.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 제공 후 입양 실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05.3.31 개정 공포('05.10.1시행)됨에 따라 입양기관의 의무로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6.29)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담, 양육정보, 사회복지서비스 및 그 밖의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및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오는 10월 1일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주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 40시간제가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종사자 고용 병원으로 확대되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들이 격주휴무에서 완전휴무로 바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대책을 밝혔다.

- 금년에 확대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개소 중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04.7월 실시한 종사자 1,0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입원 및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08년 7월 이후 또는 '11년까지이므로 단기적으로 의료공백 가능성은 없을 것)
-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토요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

- 도시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무하는 경우에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상황을 안내.
-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

종교계를 주축으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시민연대」 발족

3대 종교계(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한 뜻을 모으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연대」를 발족한다.

-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는 가톨릭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주교,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송길원 목사이며, 앞으로 여성계,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민연대의 발족은 민족적 재앙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녀출산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래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음.
- 앞으로 시민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 생명존중문화 확산, 출산장려·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정책제안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내일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내일(7.1)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기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 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
-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주년 맞아

보건복지부는 7월1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조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설치한 복지전담기구로서 9개 시군구에서 2004.7.1.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
-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담실의 운영으로 상담내용이 내실화되고, 복지대상자 급여결정기간이 법정기한인 14일보다 3일이 빨라지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공청회 개최 - 화장장·묘지부족 및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 등 억제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및 묘지부족 문제,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에 따른 국민위화감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장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 금번 토론할 법률개정안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건의내용과, 시민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정부(안)에 대하여 '05.7.1(금)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개선안을 마련하고, 1~2차례 공청회를 더 가진 다음,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주요 내용〉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을 “장례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 등 장례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자연친화적 장법인 자연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3항).
- 개인묘지, 봉안시설 등 설치신고시에도 산지관리법·산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 등 의제처리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 시설봉안시설·설치·관리주체를 민법상의 재단법인·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제2항 단서규정).
- 재해예방·시설물관리·재해복구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시설의 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시설봉안시설·시설자연장시설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관할관청에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23조 각호).
-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도입 및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 설치신고없이 설치된 시설봉안시설·시설자연장시설에 대한 이전·개수명령을 추가함(안 제26조).

의약분업 5년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이하여 의약분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번 평가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되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금일 현재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설득·참여토록 하여 ‘의약분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2005년도 병상확충 정책용자사업 대상자 선정

- 요양병상확충 및 농어촌의료기관 기능보강 -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병상확충 정책자금 총 159억66백만원의 용자대상자 3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 그 동안 요양병상 부족으로 급성기 병상에서 진료받거나 자택에서 요양하던 장기요양환자에게 적절한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요양병상확충 및 농어촌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예정.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급식 관계자들과 금년도 아동급식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는 인구노인아동심의관 주재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자활훈련기관 등 현장에서 직접 아동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소 운영자, 시군구 아동급식 담당자 및 식

약청 관계자가 참석.

- 아동급식 인프라 확충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500개소→800개소) 확충 및 사회복지관 등 취사장비 추가지원(200개소)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 지자체에 지원.

금연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청사·사무실·공장·PC방 등의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5년 3월 말 기준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53.3%('04년 9월 57.8%→'05년 3월말 53.3%)로 여전히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므로, 이러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해 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사기관인 R&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표시(담배갑 앞면: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는 조사대상자의 78.7%가 금연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조사대상자의 87%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강력한 흡연경고표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5%가 찬성. 특히, 향후 도입 가능한 흡연경고표시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데, 흡연경고표시의 강도가 강할수록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연 분만·미숙아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5일 공포하고,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개정 의의 및 적용시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아울러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함.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 발표

정부는 2005년 7월 6일 10시 국무총리 주재 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과 “2005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하였다.

-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은 작년('04.8.13)에 발표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 중에 추진과정에서 체감도가 낮다고 분석된 정책을 중심으로 1) 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2)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3)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3가지 측면에서 사례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

보건의료노조 파업기간중 비상진료 대책

7.8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7.8~)중 비상진료체계 유지하도록 하였다.

-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하고자 전국 433여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파업 및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을 국민들에게 24시간 안내할 예정
-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도 가용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장 진료 및 필요시 휴일 정상 근무

- 파업으로 인한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

‘제4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7월 7일(목)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강당에서 『제4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서는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40명)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13명) 및 자봉사자 순금배지(3명)를 수여한다.

전액본인부담항목 483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 환자 부담 최고 80%까지 줄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 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으로,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약 14만원→약 3만원)
-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약 1,360만원→약 270만원)

-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 (약 40만원→약 8만원)
 -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약 300만원→약 60만원)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경로당 운영 “공동작업장 관리자 교육” 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관리자에게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등 교육)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전국 6만여개) 운영이 단순 사랑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쇄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둘째, 일자리 참여,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강화, 셋째,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우수사례의 타 경로당 전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도자에 대한 교육 등.
- 금번 공동작업장 관리자 교육은 경로당 지도자 교육 및 일자리 참여·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7월 14일~15일까지 공동작업장 관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충청이남 지역), 서울(수도권·강원도 지역)에서 진행되며, 대한노인회 및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주관하고 노인복지관련 학계 등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하게 됨.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쇄신 주요내용〉

-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추구
- 일자리 참여,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득창출
- 모범 경로당 발굴 지정 및 우수사례를 타 경로당에 전파
-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경로당 지도자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제결혼이 '04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건복지부는 '04년 12월부터 '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심층면접 2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혼중개업자(중국 6명, 국내 20명)에 대한 면접과 일본·대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05. 7. 14(목) 토론회를 개최(서울대 호암교수회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복지지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이 외에도 본 조사에서 나타난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국적관련 사안, 가정폭력 및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등 가족정책,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공존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증진 등을 포함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사회정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관련 부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협의할 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25→18평 이상) 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또는 총무) 자격기준(3년 또는 1년 경력조항 삭제)을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05.7.15)하였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총무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또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도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이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개선함.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통합 및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 설치 신고를 유도하여 제도권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개선함.
-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존의 운영하여 왔던 시설이 시설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개선함.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모금 및 사용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
- 또한,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전용계좌의 입·출입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http://kswas.or.kr>)을 확대·개편 중에 있다고 밝힘.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일 추가 선택 등 24개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일이 매월 10일 한번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특정일에만 계좌잔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미납되는 가입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개별신청을 받아 자동이체 출금일을 10일 이외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는 등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7.6)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 앞으로 부모의 경우도 현재 학업·취업 등의 명확한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인정하여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국민연금 고지금액·납입기한 등 주요 고지내용을 점자로 번역한 안내문을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기로 함.
- 또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세부 기준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연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 절차 개선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 동 법률은 '05.7.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보건복지부는 동법의 제정·공포로 인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임.

2004년 법정전염병 발생 동향

질병관리본부는 7.19(화) '2004년 전염병통계연보'를 발표에 따르면 '04년 급성전염병 전체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8.4로 '03년의 12.5에서 비해서 5.9 포인트 증가하였고, 급성전염병 발생 증가는 가을철 발열성질환과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줄어든 전염병〉

-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 홍역,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비브리오 패혈증

〈2004년에 증가한 전염병〉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전염병
- 쓰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
- 각종 해외유입전염병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860,58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5조 8,884억원(비급여 제외)이었고, 76%에 해당하는 4조 4,855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여 연간급여비의 27.8%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 300만원이상 고액환자 86만명
- 고액진료환자 급격한 증가의 주요인은 노인 진료비 증가
- 남자는 癌, 여자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많아
-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1억원이상의 초고액환자는 247명

보건복지포럼

매월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21세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전문지**입니다.

2005년 8월호 (통권 제106호)

등록번호 라-8010

등록일 1996년 10월 1일

발행일 2005년 8월 1일

편집인/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원종욱

편집위원장 이상영

편집위원 황나미 서동우 원종욱
신영석 송태민 이삼식
고경환 김미숙

편집간사 석재은

편집/제작 박효숙

인쇄 대명기획(TEL: 2263-1292~3)

가격 4,000원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대표전화 (02) 385-7371, 3808-257

FAX (02) 352-2181

E-mail kihasa@kihasa.re.kr

정기구독안내

■ 신청방법

간행물관리실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FAX 또는
“<http://www.kihasa.re.kr/book/book03.jsp>”로
들어가서 인터넷상에서 직접 가입하세요.

전화번호 : 02) 353-1570

02) 3808-308

F A X : 02) 352-9129

주 소 :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관리담당

■ 구독료

권당가격은 4,000원이며, 연간 구독료는 13,000원이
할인된 35,000원입니다.

■ 구독료 납부

우리은행 019-219956-01-014

■ 정기구독을 하시면

매월 원하시는 곳에서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건복지포럼』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